Issue Briefing

EAI 한국외교 라운드테이블

한국 대중외교의 새로운 설계를 위한 제언

2017년 4월

대표집필 이 동 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사드 출구, 어떤 출구인가가 중요

수교 25주년을 경축해야 할 한중관계가 최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15년까지도 '역대 최상의 관계'임을 과시했던 양국관계인지라 지금의 갈등 상황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중관계는 한미동맹, 남북한관계, 북핵문제, 그리고 경제 등 주요 현안들과도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급한 현안이면서 동시에 장기 전략 과제이다. 따라서 당장 한중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꼬인 실타래를 푸는 접근 방식은 한중 양자관계 차원을 넘어서 한국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복합적 전략사고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한중관계가 한 정부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듯 급격한 기복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드(THAAD) 문제가 양국관계 악화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런데 한중관계 25년의 외형적인 비약적 발전의 이면에는 사드 문제를 초래한 보다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누적된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사드문제로 야기된 갈등을 교훈으로 하여 한국의 대중국외교와 한중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사드 이면에 깊게 드리워진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 직시하고 이에 대한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 치료라는 고난도의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드로 초래된 상흔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관리가 필요하다. 사드 문제는 한중 양국 모두 초기에 상황관리에 실패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나 확대 재생산되었다.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 전반을 압도하는 작금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양국 모두 사드로 인해 양국관계가 전면적으로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결국 양국은 사드 갈등의 출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커져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의 사드발 갈등 국면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출구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출구로 향할 수 있는 환경, 조건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국 모두가 사드 출구가 필요한 상황적 계기가 없지 않다. 한국은 대선 이후 신정부가 들어서면 양국관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 정상회의(5월), 홍콩반환 20주년(7월), 창군 90주년(8월), 그리고 19차 당 대회(10월) 까지 중요한 정치 행사와 일정이 연이어 있는 만큼 효과가

· EAI는 2017년을 맞아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본고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저자가 대표집필 하였습니다. 본고의 내용이 반드시 다른 토론회 참가자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토론자 상호간 합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 "한국 대중외교의 새로운 설계를 위한 제언" ISBN 979-11-87558-56-9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담보되지 않는 보복조치를 무한정 지속하는 정치적 비용과 부담이 적지 않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드가 배치되어 이미지와 실리 모두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최근 중국의 태도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경제보복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공개되고, '배치 철회'의 강경일변도에서 '배치 유예'로의 입장 변화 조짐도 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직후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X-밴드 레이더 탐지거리 문제를 새삼스럽게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그 동안 사드배치 문제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은 듣지도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다시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중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출구 그 자체보다 어떤 출구를 모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 신정부의 출범, 중국 국내정치 일정이 사드 출구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출구를 위한 출구', 즉 중국의 보복 조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사드의 출구인 것처럼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에 초점을 맞춘 출구는 '한시적 출구'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보복조치의 중단이 시급하다고 섣부른 타협을 시도했다가 더 복잡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MD 참여, 한미동맹의 성격, 북핵 대응 등 다른 행위자들과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협상 조건에 대한 면밀하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요컨대 사드 출구가 한중관계를 넘어 한국 외교의 새로운 설계를 위한 입구가 될 수 있도록 복합 전략구상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사드 출구를 모색하는 데 있어 북핵문제와 미중 간의 역내 대리경쟁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사드 갈등의 배경이었음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드는 북핵의 부산물(副産物)이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동시에 자칫 미중 경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로 인해 초래될 위기와 도전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이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사드배치와 대북 제재를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의심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연일 북한에 대해 강한 경고를 발신하고 있는 배경은 결국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초래될 심각한 북한발 안보 불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한중 양국이 북핵문제라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협력의 모멘텀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중이 북핵 공조로 회귀할 수 있다면 사드 문제가 정국을 주도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가 공동의 초미의 현실적 위협이자 도전임을 재각성하고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최우선적인 한중 간 '구동(求同)의 이슈'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미묘한 경쟁관계에 있는 두 강대국의 역할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북핵문제는 미중 간 흥정이나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릴 우려도 없지 않다. 요컨대 사드 출구를 단지 보복조치 중단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의 타협을 진행할 경우 새로운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사드 갈등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핵과 미중의 한반도에서의 경쟁이라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나아가 한중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도 전제되어야 한다.

한중관계의 내재된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새로운 설계의 출발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은 비정상적이다. 그렇지만 사드 갈등 해소가 바로 한중관계의 회복이고 발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한중관계 25년의 역사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표출된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드가 전해준 교훈을 통해 한중관계에 깊게 드리워진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첫째, 한중관계는 중국의 가파른 부상의 결과 예상보다 빠르게 양자차원을 넘어서 국제 환경과 구조에 취약한 관계로 전이되었다. 양국관계 진전이 '역대 최상의 우호관계'와 '중국경사론'으로 서로 상충된 의미로 해석되었던 자체가 양국관계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의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최상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상의 한중관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우려와 경계를 해소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했다.

2013년 이후 한중관계 발전의 이면에는 중일 갈등과 미중 간 대리(代理) 세력경쟁이 있었다. 미국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을 동원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자신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시켜가는 '대리 경합'의 동학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 결과 중국에게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제고되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독자적 입지와 위상은 위축되었다. 한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한중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양국은 4월 정상회담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듯이 공히 국내 정치경제적 난제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비용의 전면적 갈등과 대립은 회피, 관리하는 반면에 지역문제에서의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행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즉 양국은 상호 세력권 확장과 '대리 견제와 대응'이라는 경쟁 양상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은 정상회담에서 북핵이 초래하는 안보 불안의 심각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감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산업의 고도화, 내수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서진전략'(一帶一路) 등으로 인해 기존의 한중관계 발전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한국의 지경제적 가치와 입지는 약화 내지 모호화 되는 추세에 있다. 요컨대 한중관계는 협력의 경제적 기반은 빠르게 약화되고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취약한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한중관계의 취약성은 양자관계 발전 과정에서 상호 동상이몽(同床異夢)적 전략 가치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그에 따른 착시와 과잉기대를 초래했다. 시진핑 정부는 한국이 최소한 미일 동맹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한국에 대한 적극 외교를 펼쳤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동상이몽의 민낯은 2016년 1월 이후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이어진 사드 배치 문제로 노출되었고 양국관계의 취약성도 드러나게 되었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도 여전히 이러한 '희망적 기대와 착시'가 남아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신정부가 사드배치를 유예 또는 철회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초기에 중국이 보복조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했고, 이제는 배치를 신속히 완료하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양국이 공히 자기중심적 기대 또는 희망을 지니고 있지만 이는 사실 상호 상충적이고 양국의 협상의 여지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의 큰 실망과 충격을 가져다 줄 개연성을 안고 있다.

셋째, 양국관계는 지난 25년의 비약적인 양적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내실화가 동반되지 않은 내재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사드 사태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양국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대화채널의 제도화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양국 정상 회담은 상호 방문을 포함하여 7차례나 이루어진 반면에 한중관계의 '내실화'를 기치로 정상 간 합의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축된 고위급 전략대화는 상견례만 하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 양국 정상의 긴밀한 유대와 정상회담 중심의 양국관계를 정권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발전시켜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다. 양국이 갈등과 위기에 직면하여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가동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본격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한 경험도 축적되어 있지 않다.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대중 외교의 새로운 설계를 위한 제언

사드 문제로 노출된 한중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내재적 취약성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원인 치유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한중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기본 전제이자 조건이다.

첫째, 한중관계는 이미 양자 차원을 넘어서 국제구조와 환경에 취약한 관계로 변화한 만큼 한미동맹, 한일관계, 남북한관계, 북핵, 통일정책, 그리고 국내정치, 경제상황 등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대중 외교를 재설계하고 전개해야 한다. 즉 한국의 대중 외교는 미국, 일본, 북한 등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고차 방정식으로 인식하고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작금의 사드 문제도 결국 미중의 세력경쟁, 한중관계의 구조적 취약성, 북핵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대한 전략적 이슈이다. 향후 한국 외교는 제2, 제3의 사드 이슈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외교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복잡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에도 미중 간의 대리경쟁의 여파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압박을 요구받는 사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중 외교전략 구상시 대미외교와의 통합적 전략 구상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계속 갈지자 외교를 펼치는 국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국으로부터 더욱 거센 압박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한미동맹의 역할, 북한체제의 미래, 북미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위상 등 한반도 미래와 직결된 핵심 의제에 대한 '한국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 방안과 연동되어 대중국외교의 방향도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내 외교안보, 통일, 통상 부처 등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함께 유기적으로 고려하고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미중 간 경쟁과 협력의 복합적 관계의 파고가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방안과 역할이 선제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사드 문제는 북핵으로 촉발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미중의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다. 즉 사드 갈등은 북핵문제가 미중의 지정학 경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현실을 방증해주고 있다. 요컨대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존의 '중국 역할'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 또한 부정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외형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기대하는 '중국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도할 수 있는 수단도 충분치 않다. 그 결과 북한이 도발하면 곧바로 중국 역할론이 제기되고, 기대했던 역할이 견인되지 않으면 중국책임론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그래도 효과 없으면 다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전통적인 카드를 꺼내게 된다. 그리고 다시 '중국 뒷문'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한국이 기대하는 중국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역할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 역할이 취약한 상황에서 중국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 외교가 북핵문제에 인질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의 방안과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북핵과 통일이라는 중장기 과제를 집권기간 내에 성과를 실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국 역할'에 대한 의존만이 증대하고, 그 결과 북핵문제는 미중 간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보다 주도적 입장에서 북핵 해결 방법론을 제시하여 한국 역할을 확장하고, 이러한 한국의 시도에 대해 중국이 지지하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는 방식으로 '중국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미중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추진해가는 것이 한국 역할을 모색하는 하나의 점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미중 삼국이 북한에게 일관된 동일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북핵 해결의 최선의 방법인 만큼, 한미중 협력 구도를 견인하기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위한 한국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중 대화에서 출발하여 한중러, 한중일, 그리고 미중, 남북한 등 다양한 소다자 대화로 확장해 간다면 동북아에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냉전의 귀환'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미중 삼국이 북핵 해결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한국이 일관되게 경주해갈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관계의 외형적 발전이 아닌 실질적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 동안 정상외교와 정상 간 유대관계에 의존해왔던 양국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차원의 제도화 단계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체계화,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국 간 내재된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속될 수 있는 갈등 관리를 위한 정례화된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중관계는 민간 교류와 접촉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자관계이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갈등과 충돌이 해묵은 민족 감정을 자극하여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운 큰 특수한 양자관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은 다반사이다. 이러한 국가이익을 둘러싼 갈등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발생 초기단계에서 신속하게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양국 정부 간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이 내실화의 실질적인 과제이다.

갈등 발생시 봉합 또는 대증적 처방을 해왔던 기존의 패턴에서 탈피하여 근원적 치유와 관리의 새로운 패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양국 간 갈등의 치유와 관리 경험과 관행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갈등 및 위기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드 출구가 단지 보복조치의 출구로 봉합되어서 안 되는 까닭이다.

넷째, 한국의 대중국 전략 가치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맞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많지 않다는 교훈을 주었다. 중국의 보복조치에 직면하여 한국은 결국 미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중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향후 지속적으로 미중사이에서 선택의 압박에 시달리는 원치 않는 시나리오로 발전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핵과 통일 문제 이외에 중국과 논의할 협력 의제가 많지 않다. 그런데 두 사안은 공히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의 문제를 초래하고 미중의 경쟁을 한반도에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한국과 협력의 동기를 갖게 하는 새로운 전략 의제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전략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미중 등 강대국에 집중된 한국의 외교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중 사이에 선택의 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 중견국들과의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 것도 한국의 새로운 전략 가치를 제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의 지경제적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연선국가들, 즉 중앙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가는 외교 지형의 확장도 의미가 있다.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연선국가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향후 중국과의 경쟁이나 협력에서 협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과의 협력 공간이 위축되어 있지만 일대일로는 결국 중국의 부상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 모색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협력의 공간을 재생산해내는 대응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과 미래의 새로운 협력기회를 포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미래 중국 내수시장 개척과 신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재의 보복조치에 과잉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

— **라운드테이블 참가자**(가나다 순)_김흥규(아주대), 손 열(연세대), 이동률(동덕여대), 이숙종(EAI/성균관대), 이희옥(성균관대), 전재성(서울대),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하영선(EAI)

— 대표집필 **이동률**_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과 한중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및 중국 소수민족, 중국의 민족주의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시진핑체제 외교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중국 미래를 말하다》(편저),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_신영환 EAI 수석연구원
문의_02 2277 1683 (ext. 107), yhshin@eai.or.kr

© 2017 by the East Asia Institute